

# 광주교육청,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적극 나선다

## 급식 조리실 작업환경개선 TF '전국 최초'...6차회의 활동 종료

후드성능평가 등 전수조사 전기인덕션·조리기구 교체 설비 개선 5개년 계획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급식노동자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급식조리실 작업환경개선 TF'가 6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9일 전국 최초로 급식조리실 작업환경개선 TF를 꾸렸다. 시교육청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영양(교)사, 조리원 등 총 20명이 합류한 TF는 수차례 실무 회의와 현장 방문 등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21년 근로복지공단이 숨진 급식 조리실 종사자의 폐암을 산업재해(직업성 질병)로 처음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55세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한 현직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하라'는 내용의 건강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그 해 광주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다 강화해 '급식 업무를 5년 이상 한 현직 급식 종사자' 약 1400여명에게 저선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일 '급식조리실 작업환경개선 TF' 6차 회의를 진행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량 폐 CT 진단 검진 비용(1인당 13만원)을 지원했다.

교육부의 '전국 학교 급식 조리실 종사자 폐암검진 중간 현황'을 보면, 광주시교육청의 검진 대상자 1236명 중 519명이 검진을 받아 8명이 '폐암 의심', 3명이 '매우 의심' 진단을 받았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717명(58%)의 검진결과까지 포함하면 '폐암 의심' 종사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급식 조리실 종사자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흠'(cooking fumes)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등이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급식 조리실 종사자 1인당 식사 담당 인원 감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TF팀은 작업환경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폐암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꼽았다. TF팀은 먼저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후드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공립 255개교를 대상으로 후드성능평가 전수조사가 완료됐고, 당장 이번달부터 사립학교 대상으로 전수조사

를 실시한다. 기존 가스기구를 전기인덕션으로 바꾸는 급식실 조리기구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신설·재배치 학교 중심으로 우선 교체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약 45억원을 들여 총 40개교에 전기인덕션을 설치했다. 올해도 33억원을 들여 15개교에 조리기구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교육청 급식실 맞춤형 기본설계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달 중 4개 학교(광주여고, 광주공고, 첨단고, 운남고)의 환기설비를 개선 시범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수립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5개년'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추진된다. 올해 총 59개교(약 70억 소요), 2024년 65개교(78억), 2025년 52개교(약 62억), 2026년 50개교(60억), 2027년 17개교(약 20억)를 대상으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를 개선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각급 학교 급식조리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노조와도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 해경, '정보호' 실종자 4명 수색 범위 확대

### 해상으로 유실 가능성 경비함정 등 배치 수색

신안 해상에서 전복된 '정보호' 실종자 4명이 선내에서 발견되지 않자 해경이 해상으로 수색범위를 넓혔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남 오후 원복된 정보호의 조타실과 식당, 선원침실, 선수 여창, 창고 등 선내를 수색했으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4일 오후 11시19분 신안군 임자도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정보호의 실종자는 현재 4명이다.

정보호에는 당초 12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사고 직후 3명은 구조되고 9명은 실종됐다. 실종자 9명 중 5명은 선내 수색 과정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4명이 선체에서 해상으로 유실됐을 것으로 보고 해상수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현재 집중수색 구역은 중·대형함정 위주로 전환하고, 소형함정과 민간어선은 연안 및 도서위주로 수색범위를 조정했다.

수색에는 민간어선 30척과 해경함정

27척, 해군함정 5척, 관공선 4척 등 합선 66척과 해경 항공기 2대, 군 항공기 4대, 소방항공기 1대 등 항공기 7대가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다. 또 실종자들이 흉도 쪽까지 떠내려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상수색 구역도 확대한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들이 선내에서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나머지는 해상으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흉도 바깥쪽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연안으로 타고 왔을 가능성도 고려해 연안쪽 소형 경비함정을 배치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 '학생 삼청교육대' 존재 확인... 600여명 끌려가

### 진화위, 추가 피해 진실규명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와 관련 학생들까지 입소시킨 '학생 삼청교육대'의 존재와 피해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에 따르면 학생 삼청교육대는 계엄사령부의 1980년 9월19일 2단계 순화교육 입소 계획에 따라, '학생 불량자' 600여명에 대해 1980년 9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제11공수여단에서 실시됐다. 학생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수업 시간에 연행되기도

했는데, 삼청교육대 입소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로 생활기록부 등에는 관련 기록이 일절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해 6월7일 1차 조사 결과에서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고 밝히고, 이번 2차 조사를 위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기 진실화해위원회 등 조사기록과 국가기록원, 국방부, 기타 자료 등을 수집해 조사했다.

김혜인 기자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